김진표 "선거제도 고쳐야…총선 앞둔 내년초 개헌 적기"

"의원정수 늘리되 인건비 동결하면 의원 80~90% 동의 할 것"
"윤 대통령 '내가 손해보더라도 개헌해야 된다' 강하게 얘기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인건비 (총)예산은 동결하는 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의원정수 확대 및 예산 동결' 방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가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노정됐으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오간 발언을 언급하며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아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라고 말했다"며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개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개헌이나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라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은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는 행정부에서 40년을 넘게 일했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20년을 일했다"며 "저는 이것(개헌)을 제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고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실리콘 웨이퍼 라인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당대회, 총선 득표력·확장성에 초점 김기현 후보 '김장연대·윤심 100%' 아닐 수도"

"나경원 연대 기다리고 있는 중"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1일 "이번(당대표)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 서구 당협에서 기자들이 '최근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오른 것에 대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밝히며 "그런 생각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지율 상승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에 따른 반사효과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은) 남아 있는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득표력이 있는가?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가를 볼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수도권서 패배한 게 가장 컸다. 121석 중 17석밖에 못 얻었다. 누가 수도권에서 이길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과의 연대는 "(나 전 의원께) 위로의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았다. 어느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안 의원은 '당내에 지분이 약하다'는 경쟁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선 "매우 큰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에 당선되면 대거 낙하산 부대를 보내고 공천 파동을 일으킨 게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지만, 저는 계파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천 파동 정당이 아니라 공정한 실력 공천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향해 유치한 신경전을 벌인다며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선 "신경전 벌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개인마다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모습 중에서 어떤 부분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짚은 부분도 있으니 참조를 하겠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이랑 안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가 통화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직접 통화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눈 대화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이 꼭 대통령의 생각 반영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인상 받았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이 "김기현 후보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100%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나"라고 묻자 안 의원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김연경 선수·가수 남진의 사진 논란은 "본인(김 의원)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가 살아남으려면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 길러야"

금오공대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상북도 구미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이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그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앙 정부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혁파와 자치 보장의 필요성, 대학의 '유연한 대응과 변화'도 강조했다.

이어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한 박 대통령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술 인재를 배출한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검찰의 신작소설" vs "이재명 범죄실록"

민주·국힘 北 송금 의혹 공방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그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을 고리로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가 '이재명 방북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검찰의 신작소설"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누가 봐도 대북사업의 검은 실체를 담은 '범죄 실록'"이라고 맞받아쳤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했다는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등을 거론하며 "모르던 사이라던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돈독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자라 수사를 받는다는 이 대표의 탄압 코스프레와 달리 많은 국민은 작금의 사태를 보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를 상상하며 한숨짓는다"며 "법치는 온데간데없고 나라가 통째로 각종 이권 카르텔 집단의 놀이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관련 의혹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한 데 대해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에 입각한 '이재명 대표 범죄 실록'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대표뿐 아니라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 당국, 집권여당이던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고 '총동원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방탄 장외 투쟁"이라며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투쟁에 전당력을 쏟겠다는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지게 된다. 진실은 선동으로 감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